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김종범 (대전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발생한 촛불시위를 한국적인 시각과 조건에서 기존의 해석이나 분석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촛불시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00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촛불의 역사적인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나 대통령을 바꾼다는 정치공학적 의미만으로 축소·해석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단순히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나 조기대선, 혹은 개헌과 같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력 투쟁이나 대통령의 선택 문제로 몰아가는 일반적인 분석이나 언론의 방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촛불로 인해 우리사회의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들과 변화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개의 장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논문의 구성과 관련된 목적과 서술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논문 분석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문화변혁운동 성격을 촛불시위의 주요 양상과 내용을 통하여 서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현재진행형적인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간략한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주제어: 촛불시위, 한국사회, 문화변혁운동,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

I. 2016 촛불시위와 한국사회

2018년은 서구 민주주의 문화혁명으로 평가받는 68운동이 발생한지 50년이 된다. 68운동이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변혁 운동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건 민주주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진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구 민주주의가 한국에 소개되어 도입된 지 100여년이 흘렀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한국형 민주주의가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이념과 체제를 형성시켜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되지 못하고 다소 퇴행적인 양상과 정치권력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제도적인 결핍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질을 담보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6년에 시작한 촛불시위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 변혁을 초래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와 대중운동의 새로운 전환기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정표라고 평가받는 '87년 민주화'를 여전히 진행형적인 촛불시위와 비교하거나 새로운 평가를 여기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87년 민주화나 이전에 발생했던 수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들과는 다른 분명한 의미와 변화가 존재한다.

논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전환기적 사건인 촛불시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단순히 발생한 사회적 사건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보기에는 결과론적인 변화와 함의가 너무 크다. 여전히 진행형인 촛불시위 이후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마냥 완결되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촛불시위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는 출발점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근대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혁들에 비하여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혁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이러한 촛불시위의 사회문화변혁적 성격과 의미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2016~2017 촛불시위 관련 연구 결과는 촛불시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다수를 차지한다¹⁾. 이들 연구들이 지향하는 학술적인 방향은 촛불시위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의미를 추적하면서 넓게는 촛불시위가 갖는 민주주의 성격에서부터 참여의 행태론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기존 촛불시위를 다른 논문과 연구서들 역시 한미동맹의 문제나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대안 모델로서 촛불시위의 성격,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문제를 정당정치와 연계하거나, 새로운 참여 형태로서 네트워크 정치의 성격 분석, 정치권력의 경의존성에 기반한 촛불시위의 정치공학적 성격과 의미 분석 등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²⁾.

이들 연구 결과들은 촛불시위를 변화와 변혁을 이끈 주요한 사건과 운동으로 보고 있지만, 외신들이나 해외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촛불혁명(Candle Revolution)”이나 “정치혁명(political revolution)”의 수준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어떤 방법과 시각에서 촛불시위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정치적 이

-
- 1)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체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송호근, 『촛불의 시간: 군주, 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서울: 북극성, 2017; 강명세,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의정연구』, 제 51권, 2017; 장훈, “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의정연구』, 제 51권, 2017; 조중빈, 『새정치를 위하여 눈을 감아라: 촛불이 밝힌 국정철학, 시민이 말해야 대통령의 듣는다』, 서울: 인텔리겐짜, 2017; 최영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서울: 책갈피, 2017; 서복경·이지호·이현우,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서울: 책담, 2017 등.
- 2) 홍성구,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의 공론영역: 속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제1호, 2009; 강용진, “직접행동과 속의민주주의: ‘촛불집회’사례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 16권 2호, 2008; 고원,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7권 2호, 2008;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 2권 제 1호, 2009; 김중법, “촛불시위를 통해 본 정치권력의 변화와 의미.”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2008; 권지희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서울: 해피스토리, 2008 등.

벤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례는 50여 년 전 발생한 68운동 이래 최초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였고, 정치권력의 교체까지 초래한 촛불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일은 촛불시위를 시구의 보편적인 정치혁명으로 해석하는 만큼이나 위험하고 부적절한 분석과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촛불시위는 시위의 기간이나 참여인원 및 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 촛불시위와도 확연하게 다른 양상과 내용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촛불시위를 한국적인 시각과 조건에서 기존의 해석이나 분석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16년~2017년에 걸쳐 벌어진 촛불시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00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촛불의 역사적인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나 대통령을 바꾼다는 정치공학적인 의미만으로 축소·해석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단순히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나 조기대선, 혹은 개헌과 같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력 투쟁이나 대통령의 선택 문제로 몰아가는 일반적인 분석이나 언론의 방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촛불로 인해 우리사회의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의 출발점과 분석의 기준은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첫째, 촛불시위의 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의 중요성이다. 특히 시위에 참가한 국민의 다양한 주체와 일련의 시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제도와 국가권력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양상과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촛불시위의 주체 문제와 시위 참여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주로 국민주권이나 국민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인이다. 셋째, 촛불시위의 양상과 시위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 다양성이다. 이는 문화변혁운동의 의미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적폐청

산'이나 '새로운 시대'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촛불시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시위의 양상과 운동의 방식 및 주장들은 50년 전 서구사회 본질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던 68운동의 양상과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논문의 구성과 관련된 목적과 서술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논문 분석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논의를 그림시의 대항해게모니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문화변혁운동 성격을 촛불시위의 주요 양상과 내용을 통하여 서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현재진행형적인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간략한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II. 촛불시위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선행연구와 이론적 토대

촛불시위라는 시위 형태로서의 기원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³⁾. 한국에서의 촛불시위가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PC 통신사 코텔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시위⁴⁾에 등장한 이래 한국 현대사의 주요 굴곡점과 전환기적인 사건에서 어김없이 나타난 평화시위의 양상이다. 다음의 <표1>은 한국의 촛불시위 개요이다.

3) 촛불시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일련의 기간 동안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야간에 진행되는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으로, 침묵시위의 형태를 띠고 정의된다. 가장 대표적인 촛불시위로 알려진 것은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촛불시위로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주.

4) "PC 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 모색." 『문화일보』 2004년 8월 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80101031629066001>(검색일: 2017.6.21.).

〈표1〉 한국 촛불시위의 양상과 내용

연도	시위 내용	형태	연도	시위 내용	형태
2002.12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	촛불 집회	2009.02	용산 참사 추모	촛불 문화제
2004.03~04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촛불 집회	2011	반값등록금 공약 촉구	촛불 집회
2004. 12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촛불 집회	2013년 6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규명	촛불 집회
2004. 11.~ 2005.02	국가보안법 반대	촛불 집회	2016.10.~ 2017.05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 집회
2008.05	미국 광우병 수입 협상 반대 시위	촛불 집회	2018.01~ 03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촉구 시위	촛불 집회

정리: 저자

그동안 발생했던 촛불시위의 양상이나 조직 및 참여인원 등은 여러면에서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촛불시위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기존 연구 결과들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두 명의 여중생 사건이나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문제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⁵⁾. 시위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체나, 동기, 구조나 제도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를 통해 촛불시위를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그동안 발생했던 촛불시위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진행된 촛불시위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

5) 이완범, “2008년 촛불시위의 영향 : 촛불 진화 후 '중도실용' 구호를 내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종이 돌' 반격.” 『정신문화연구』, 제 34권 4호, 2011; 서광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인가: 2008년 촛불시위의 특징과 그 원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김종법, 위의 논문; 윤성이,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2009; 김옥,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2010; 채진원, “1인 시위와 촛불시위의 정치철학적 의미 : 한나 아렌트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고정민·송효진,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함의 :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이나 방법론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수준과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거시적인 혁명이론으로 분석들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역시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과 조건 및 환경을 고민해야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촛불시위 자체를 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논쟁은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나 반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제기하는 혁명이론을 기초적인 이론 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⁶⁾ 또한 반마르크스주의적인 성격의 구조주의적 혁명이론을 적용하거나 원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며, 한국적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촛불시위의 한국적 특수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촛불시위의 혁명적 성격 혹은 문화변혁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혁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온 국민의 기대나 열망과는 달리 전두환 체제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민주화운동’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 이후 탄생하였던 정치권력들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성장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국민들 모두가 원했던 실질 민주주의나 87년 체제에서 요구했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시위는 적어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정치적 사건과 진행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원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복원과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만한 수준과 내용을 표현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인용,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 국정농단의 주역들에 대한 수사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규명, 새로운 정치권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정부 탄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로 규정되는 지난 정부의 여러 폐해

6) 혁명이론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혁명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연구방법은 다양한 인접 학문 영역과 겹치지면서 197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들과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추진을 위한 노력,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준비작업 등 현재 진행 상황들은 국민들이 2년감 촛불을 통해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촛불시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실험과 요구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정치 환경과 조건에서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대치상황,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자주’를 거론하거나 독자적인 행동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촛불시위를 통해 이루어졌던 탄핵인용과 정권교체 그리고 사회변혁은 서구 역사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혁명’에 준하는 것이다. 체제가 바뀌거나, 생산양식이 변하거나 구체제를 단절하고 현대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수준의 혁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황폐화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에 대한 준비는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으로서 촛불시위의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촛불시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은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이나 방법론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은 두 가지 개념과 방향이다. 첫 번째 개념은 총 23회에 걸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시위는 기존의 정치사회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이 직접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주권회복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람시(Gramsci)가 제기한 대항헤게모니(Contro-Egemonia)이다. 대항 헤게모니 개념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헤게모니 이론으로 유명한 그람시가 제기한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이거나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깨드리기 위해선 기득권에 맞설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진 개념이다⁷⁾. 두 번째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문화변혁운동

7) Antonio, Gramsci, a cura di Gerratana Valentino, *Quaderni del carcere*, Torino, Einaudi, 1975, p. 367 등.

으로서 촛불시위를 해석하는 방법과 이론적 분석틀이다. 그것은 마치 1968년 서구 사회와 세계를 휩쓸었던 새로운 문화운동(혹은 문화혁명)이었던 68운동(혹은 혁명)과의 유사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쉽지 않을 것이며, 미완성이나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촛불시위로 인해 만들어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양상과 국면이 기존 제도와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면 앞서 전제한 사회변혁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의 성과나 내용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한국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촛불시위에 대한 사회과학적이고 문화변혁적인 분석과 비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촛불시위가 갖는 정치·문화적 변혁과 정치의식의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2. 그람시의 대항헤게모니 개념⁸⁾

그람시의 대항헤게모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게모니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람시가 제시한 헤게모니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람시의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겪게 된 노동자 문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제문제를 여러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구체화 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람시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지속적인 정치경제 권력의 유지 요인과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8) 이 부분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항의 헤게모니 개념 설명 역시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김종법, 『그람시의 군주론』, 서울: 바다출판사, 2015.

그람시가 토리노라는 산업화된 도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게모니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과 주제들에 천착하였다. 그람시가 이 시기 제기하였던 개념들과 주제들은 앞서 이야기한 ‘헤게모니’ 외에도 ‘정치사회’, ‘시민사회’, ‘진지전과 기동전’, ‘수동적 혁명’, ‘지식인’, ‘대중문화’, ‘민속’, ‘상식’ 등의 수많은 개념들이 있다. 그람시는 이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거론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당대 주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방법론이나 혁명의 완수를 위한 경제적 토대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전개에 치중한 반면, 그람시는 경제적 토대만큼이나 중요한 상부구조의 연결고리들 즉,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까지 연구의 초점을 확장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지평을 확장시켰다.⁹⁾

그람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통하여 지배계급이나 사회 계층 분석의 중요한 기준과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헤게모니의 재구성 혹은 대체라 할 수 있는 대항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람시가 제시하고자 했던 헤게모니 연구를 위해 제기한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의문들에 답을 구하는 것이 대항헤게모니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항헤게모니와 연계하여 촛불시위를 관련시켜보고, 촛불시위를 대항헤게모니 형성의 공론장 역할과 의미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빨갱이’나 ‘종북주의자’나 알고 있을만한 그람시를 현재라는 시점에서 끄집어 내어야 할 당위성의 출발은 촛불시위이다. 그람시가 제시했던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학문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헤게모니론이나 박정희 체제 분석,

9) 이러한 평가는 초기 그람시 연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어네스트 라클라우, 상탈 무페, 앤 S. 사순, 크리스틴 부치 글록스만, 봄비오 및 살바도리 등에 의해서 확인된 것으로 마키아벨리가 정치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근대 정치학을 출발시켰던 것과 유사하게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지평을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배계급 분석 등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김종범 2016) 그러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를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람시가 제기했던 많은 논의가 개념들이 우리사회의 많은 면들에서 더욱 정교하고 유용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박정희 체제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 이후 진행되었던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 사태’, 그리고 탄핵정국과 2년에 걸친 촛불시위는 다시 한 번 그람시 이론의 유효성을 증명했다. 촛불시위 이후 전개될 한국사회의 상황은 대항헤게모니의 발전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정부 교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청산되어야 할 역사의 과정과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형인 촛불시위가 단순한 이벤트나 ‘우연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선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체제 반복을 용인하고 있는 한국사회 내면의 구조와 그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지배계급의 끈질긴 지배력의 생명력이 어떤 헤게모니의 재생산 구조에서 초래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배 계급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개입과 변질, 지배 계급에 맞서는 하층 대중들의 저항과 새로운 헤게모니 창출의 노력과 시도, 국가권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기만 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 상층부를 이루는 구성원들,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에 맞서는 지배계급 블록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국민과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이루어낸 촛불 시위 등은 그람시 이론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촛불시위를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내용이 채워질 대항헤게모니 개념 역시 촛불시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가정 아래, 새로운 이론과 개념으로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람시적인 사고와 주장을 통해 대항헤게모니를 재구성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출발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항해계모니 형성의 주체 문제이다. 그람시가 주장하는 기층 계급의 동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항해계모니를 형성하는 계급과 계층이 일반 대중 혹은 민중이라는 주체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을 가지고 대항해계모니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대항해계모니의 내용 구성에 대한 문제로 그람시적 표현을 빌자면, 의식의 혁명을 통한 문화운동의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의 문제이다. 이는 그람시가 ‘신질서’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고, ‘현대군주’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했던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실천(prassi)’이며, 현대적 의미로 환치한다면 행동’이 수반된 직접적인 ‘참여’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에 의한다면 대항해계모니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대항해계모니란 기존의 사회질서 혹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해계모니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대중, 국민, 시민, 다중(多衆)과 같은 기층계급과 계층들이 일반적인 원칙과 주의(主義) 및 체계를 갖춘 일정한 방향성을 내포한 실천과 공감의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또한 “실천과 공감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과 의식의 변혁이 수반되는 문화변혁의 성격을 갖는 구체화된 일상과 공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기성의 사회질서 혹은 지배계급의 지도 원리를 해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며,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수동성과 외부 압력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친일과 친미로 대표되는 외부지향세력과 군부와 부패한 정치가 및 관료들로 구성되는 지배계급의 형성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아래로부터의 변혁이나 의식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운동을 만들어내기 역부족이었으며, 상황의 전환이나 변화라는 것이 주로 ‘외형적인 변화’나 ‘체도의 개선’ 차원에 머무르는 수동적인 정치변화 외

에는 의식과 문화가 모두 변혁될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문화격변 운동이 발생하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사에 있었던 수많은 시위와 운동들이 체제를 변혁하거나 지배질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던 것은 의식의 전환과 실천적인 문화격변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제도의 변화나 신설 혹은 ‘온정적 민주주의’의 행태를 자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항해게모니의 구축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다양한 생각과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었고, 2016년 촛불시위는 그러한 가능성과 내용을 상당 부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촛불시위의 문화변혁적 요소의 쟁점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어떤 영역에서 또 무엇을 바꾸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나 지표 등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수준에서 촛불시의 문화변혁적인 성격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항에서는 세 가지 수준에서 촛불시위의 문화변혁적 성격을 가늠하고자 한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주체의 문제와 촛불시위에 담겨 있던 내용과 의식의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결과물 문제이다.

우선 촛불시위의 주체에 대한 쟁점 문제이다. 촛불시위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서구 68운동의 경우처럼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고,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촛불시위의 참여 주체문제가 비교 가능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한 촛불시위의 경우 그 내용과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기존의 민주화 운동 시위나 이전 촛불시위와 비교 가능할 것인

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촛불시위의 주체는 분명하게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시민’, 혹은 ‘학생’, ‘노동자’ 등의 주체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촛불시위의 내용이 의식과 문화변혁의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이었는가의 문제이다. 오랜 군사정권의 비민주성을 끊어내고,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87년 민주화 체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내용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와 유신체제로 부활은 모든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촛불시위는 그러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이었다. 따라서 촛불시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주장한 것은 단순히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나 수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촛불시위가 꾸준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1,700만 명의 연인원이 참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촛불시위의 내용이 의식의 혁명이나 문화변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는 충분하다.

세 번째는 촛불시위 결과에 대한 쟁점이다. 이는 촛불시위가 적어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도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영향과 결과물들을 가져왔는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의 명확한 사실관계나 서술 자체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촛불시위 자체는 2017년 4월 29일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수립이나 2018년 6월 지방선거나 개헌 등의 정치적 일정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로 인해 촉발된 한국사회의 제도와 내용의 변화는 작지 않다.

촛불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제도의 실질적인 구현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당연하고 유일한 민주주의 정체로 받아들였던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될 것이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만큼

은 이전 정부와는 충분히 다른 방향과 개혁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유형의 개혁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주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식의 전환(혁명 수준은 아닐지라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이유이다. 다시 말해, 1등만을 강요하는 경쟁사회, 기득권을 위한 사회지배구조, 학벌중심의 사회, 성장이나 발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치의 전환, 평화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 등에 집중하는 물질만능주의의 사회문화 등이 지배하는 의식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인식이 필요하며, 현재의 과정은 이러한 의식 전환을 위한 기간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Ⅲ. 촛불시위를 통해 본 사회문화의 변화 가능성과 요소

1. 촛불시위와 사회문화의 변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했던 촛불시위의 과정과 내용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전통과 제도가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역동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일어났다. 2008년 촛불시위는 2017년 현재의 촛불시위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지만, 그 내용이나 진행과정 등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촛불시위나 2017년 촛불시위 모두 국가 권력의 변화와 함께 발생한 국민의 의사표현 과정의 하나이자, 국민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민주주의의 요건과 특징의 변화가 국민의 요구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촛불시위 형태로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거나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권력이 교체가 되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인 퇴행이 가능했던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 정치문화의 안정적이고 명확한 고착이 부족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외형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 고착화는 간단하고 단순한 쟁점과 이해관계에 의해 깨어질 여지가 다분했고, 다소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허약성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와해되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정권을 획득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퇴행적 권위적인 민주주의의 지속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치문화의 허약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시작된 촛불시위는 2008년 촛불시위 보다 비폭력적이라는 점, 다양한 문화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참여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과 같은 형식이라는 점 등에서 2008년 촛불시위에 비해 훨씬 진화되었다. 비록 탄핵반대 맞불집회가 강화되었고, 극우 보수 진영의 공격 및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같은 변수들로 인해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변화의 내용과 요인들은 학문적인 영역이나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항에서는 몇 가지 기준과 요인들을 통해 그 변화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위 참가자의 수와 규모이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3회에 걸쳐 1,700만 여명이 참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변혁의 열망이나 의미가 작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집회마다 다양한 소주제를 통해 집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시위 참가자 누구에게나 참여의 변과 의견을 발표하게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위와 내용을 보여주었다. 관행이나 관습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사회의 오래된 잘못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총합했다는 점에서 기존 촛불시위나 노동이나 특정 집단이 조직해서 진행했던 집회와도 분명 다른 성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위 참여의 주체이다. 기존 시위에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참여했던 경우가 있고, ‘민주화’나 ‘노동’ 혹은 ‘생존권’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했던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촛불시위와 같이 ‘국민’이 조직하여 ‘국민’의 열망을 시위 중 직접 담아 ‘국민’의 주권을 완성시킨 사례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 층의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기성 질서와 적폐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졌다. 더욱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인용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혁명’,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집회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시위 주체에 대한 논쟁, 다시 말해 ‘시민’이냐, 유권자이냐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3차에 걸친 촛불시위의 추진 주체는 참여한 국민들외에도 시위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내주었던 국민들을 망라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에 의해 시작되어 ‘국민’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23차 촛불집회 참가자 수 추계와 집회별 성격 분류

	날짜	참여인원		시위의 주요 내용
		경찰추산	주최측추산	
1차 범국민행동	2016년 10월 29일	12,000	50,000	경적시위, 박근혜 전대통령 하야 요구, 인터넷 생중계 시위 등
2차 범국민행동	2016년 11월 5일	48,000	300,000	고 백남기씨의 영결식과 연계, 법원이 행진 금지처분 일시 정지 결정으로 평화시위 등
3차 범국민행동	2016년 11월 12일	269,000	1,060,000	시민과 1천500여 시민단체 연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조직,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의 장

	날짜	참여인원		시위의 주요 내용
		경찰추산	주최측추산	
4차 범국민행동	2016년 11월 19일	275,000	960,000	중고등학생의 촛불시위 참석의 중요한 분수령, 시위 행렬의 동선을 학익진으로 구성, 맞불 태극기집회, 문화공연의 장
5차 범국민행동	2016년 11월 26일	330,000	1,900,000	200만명에 근접한 참가인원은 촛불시위의 평화적 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수치
1차 총파업	2016년 11월 30일	8,000	60,000	민주노총 등에서 조직한 별도의 집회
6차 범국민행동	2016년 12월 3일	429,000	2,320,000	탄핵안 가결에 큰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집회로 평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7차 범국민행동	2016년 12월 10일	166,000	1,043,400	문화적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
8차 범국민행동	2016년 12월 17일	77,000	771,750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개헌 등의 정치적 이슈가 부각된 분수기점
9차 범국민행동	2016년 12월 24일	53,000	702,000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10차 범국민행동	2016년 12월 31일	83,000	1,104,000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명칭 변경
11차 범국민행동	2017년 1월 7일	38,000	643,380	세월호 참사를 추모 집회
12차 범국민행동	2017년 1월 14일	이후 경찰의 공식집계 발표를 안하기로 결정	146,700	정원스님 영결식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3차 범국민행동	2017년 1월 21일		353,400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맛이 촛불!"
14차 범국민행동	2017년 2월 4일		425,500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구속, 촛불개혁 실현"
15차 범국민행동	2017년 2월 10일 ~ 11일		806,270	"천만촛불 명령이다! 2월 탄핵! 특검 연장!"

	날짜	참여인원		시위의 주요 내용
		경찰추산	주최측추산	
16차 범국민행동	2017년 2월 18일		844,860	태극기와 노란리본의 총들과 갈등,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 참석
17차 범국민행동	2017년 2월 24일 ~ 25일		1,078,130	민중총궐기 성격의 집회
18차 범국민행동	2017년 3월 1일		300,000	탄핵선고 전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갈등 고조 양상, 연인원 1,500만명 달성 집회
19차 범국민행동	2017년 3월 4일		1,050,890	탄핵인용을 압박하고 기대하는 집회
20차 범국민행동	2017년 3월 9일 ~ 11일		720,000	탄핵 인용 후의 공식적인 첫 집회, "퇴진 운동으로서"의 마지막 집회
21차 범국민행동	2017년 3월 25일		100,000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어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이 재개된 집회, 사드문제 부각 집회
22차 범국민행동	2017년 4월 15일		100,000	촛불집회 겸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
23차 범국민행동	2017년 4월 29일		—	4월 29일에 진행되었던 대선 전의 마지막 집회,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누적인원		1,773,000	16,832,280	

자료정리: 저자

세 번째는 2016년~2017년 촛불시위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 촛불시위의 경우 2008년과 다른 국민민주주의 축제의 문화운동이자 열린 민주주의의 교육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¹⁰⁾ 또한 인터넷 민주주의와 직접 행동민주주의 및 광장 민주주의의 전형으로서 세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

은 실험 사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양극화나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론을 약화시키는 국민주권의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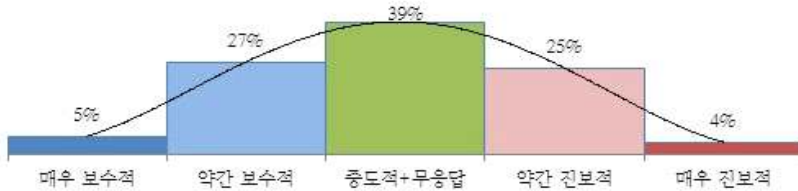
2. 촛불시위 이후 진행된 문화변혁의 사례와 한계

촛불시위로 인한 문화변혁의 다양한 결과들은 논자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한국사회가 아닌 새로운 한국사회였다는 점이다. 국민이 요구했던 새로운 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년의 한국사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촛불시위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들은 현재 진행형이거나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변화가 무엇일 수 있는지, 또 지표나 지수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변화된 한국사회의 내용을 돌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아무래도 의식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이라고 지칭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이념에서 보수나 중도를 지향한다고 밝힌 국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이러한 조사결과와 지표들로 인해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영속되리라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다. 실제로 2012년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갤럽 2012) 보수와 중도(+무응답) 계층이 약 70%에 달하며,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2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 기관이 2017년 10월에 조사한 이념성향 분포에서는 진보성향 응답자가 34%로 보수성향 응답자 25%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10) 김상곤, “2008 촛불집회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제15권, 2009, pp. 109-110.

<그림1> 2012년 한국인의 이념성향 조사표 및 진보와 보수의 편차



(월별 추이)

2012년	사례수(명)	(대우+약간) 보수적	중도적+무응답	(대우+약간) 진보적	이념지수* (보수, 진보 차이)
1월	3,031	30	37	33	진보 +3
2월	6,586	32	36	32	0
3월	7,831	30	38	32	진보 +2
4월	6,977	31	36	32	진보 +1
5월	5,880	32	39	29	보수 +3
6월	6,728	32	39	29	보수 +3

(질문)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중도적,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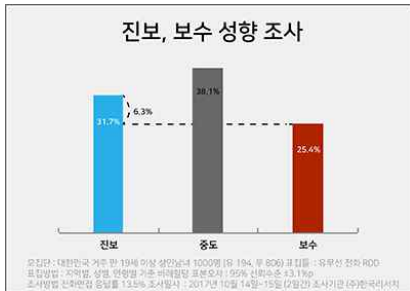
*이념지수: '(대우+약간) 보수적' 비율과 '(대우+약간) 진보적' 비율의 차이. 이 차이가 '0'이라면 보수와 진보가 같음을 의미하며, '진보 +3'은 진보 비율이 보수 비율보다 3%포인트 더 많음을 의미한다.

출처: <http://www.gallup.co.kr>(검색일: 2018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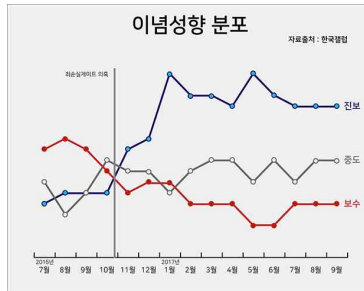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탄핵정국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 등이 이어진 2017년 연말까지 이어졌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격차가 11년전과는 다른 상황을 나타냈다. 언론사나 여론조사별로 그 차이는 다소 편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나 50대 이상 유권자의 수가 20대나 30대 유권자에 비해 상당히 숫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의 양 이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이념적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생각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변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의식과 이념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인권, 평등, 정의, 진보 등의 가치들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기준 좌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식 변화라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리서치에 의해 조사된 한국인의 이념성향 여론조사 결과는 촛불시위 이후 한국사회의 이

념적 지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그림2>와 <그림3>을 참조하면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그림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욱 분명한 이념 전환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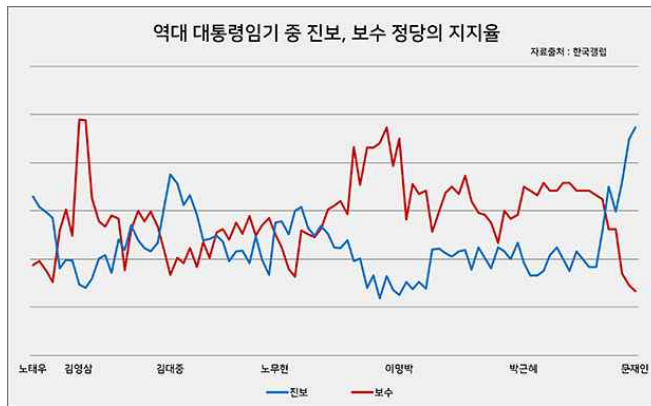
<그림2> 진보와 보수 성향조사



<그림3> 이념성향분포도



<그림4> 역대 대통령 임기 중 진보, 보수 정당의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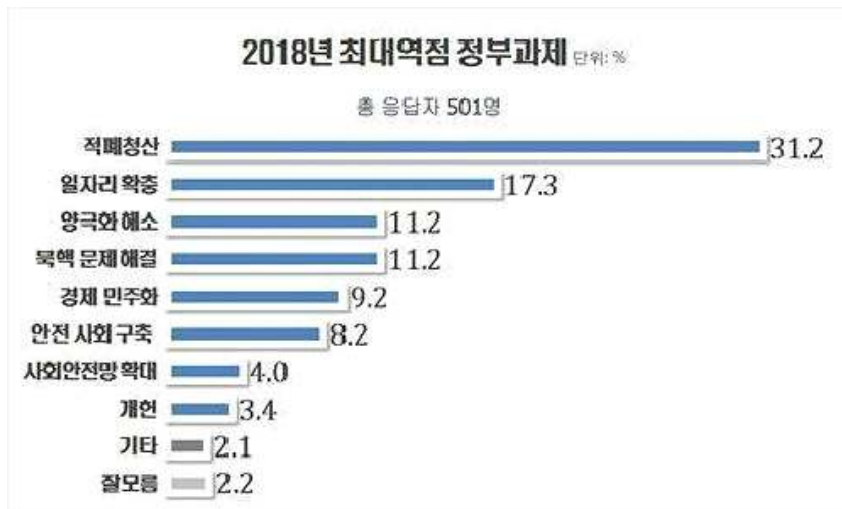
출처: <http://www.raythep.com/>(검색일: 2018년 1월 29일)

이러한 이념 전환과 변화는 탄핵정국에 이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야할 2018년 정부과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전 정부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경제적 가치들이 약화되고, 부패하고 부정한 사

회를 정상화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다. 촛불시위의 가장 큰 화두였던 ‘적폐청산’이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우선시 되었고, 이전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경제회생’이나 ‘북한문제’ 등과 같은 이념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들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한국인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전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나 ‘안전사회구축’과 ‘사회안전망 확대’와 같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내걸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종북’과 ‘좌파정부’와 같은 단어들도 여전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영향력 안으로 축소됨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사고와 발전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5> 2018년 최대역점정부과제(우선평과제 순위표)



출처: 리얼미터 2018.

촛불시위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까지도 움직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고 정책화하려는 다양한 시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제도, ‘신고리원전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실제 집행,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 구성 등은 이러한 의식과 문화변혁을 실제의 정책사례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대의제 국가에서 국회라는 국민들의 대의기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요소를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도 논란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양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요소의 실제 활용은 촛불시위에서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직접 정책과 제도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힘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한국사회

2016년과 2017년 4월까지 이어졌던 촛불시위는 2008년에 진행되었던 촛불시위와는 분명한 차이와 특징을 나타냈다. 2008년 촛불시위 양상은 생활정치의 연장선에서 국민권리의 회복운동이라는 성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정치운동이자 국민적 권리의 회복 운동의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시위의 이슈가 너무나 비정치적인 문제인 먹거리 문제에서 출발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적 권리의 요구와 회복이라는 목적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활 집회라는 측면은 이전 비민주적 사회에서 정치적 권리와 권력교체를 요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었다. 이에 반해 2016년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국민적 저항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사회와 민주주의를 열망

하는 국민의 자발적 의사와 참여라는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양극화나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직접 이를 수정하고 멈추고자 했다는 점은 2008년 촛불시위와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촛불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 퇴행과 부패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시도와 노력이 성공함으로서 새로운 정치권력과 사회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민주적 목적과 과제 달성에 성공했지만, 이것이 실질 민주주의의 확보와 보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계급 정당의 발전이 아닌 기득 계층과 연계된 부르주아 정당의 지속성이 유지됨으로서 ‘욕망의 정치’로 명명되는 이명박 정권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더군다나 그러한 연장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197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의 독재국가 회귀로 이어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발생하였던 촛불 시위야말로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력이자 국민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정치권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전환기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권재민이라는 국민주권설은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최대의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보장하느냐의 문제였다. 이는 국민의 주권 실현 방식에 대한 제도화와 내용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극단적인 투쟁까지도 불사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참정권 확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계급과 정치적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무산계급과 일반 국민과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참정권의 확대만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대중과 민중이 제대로 정치권력을 장악해 본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배계급의 권력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았다. 이는 서양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 역시 국민의 정치적 승리가 꼭 민주

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도 아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이룬 정치적 성과는 컸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보장이거나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보인 것도 그러한 예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제도인 정당 정치 역시 그다지 커다란 믿음이나 적절한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유효성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노정될 경우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국민 발안이나 국민소환과 같은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위나 탄원제도 외에는 그다지 적절한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은 간접적인 방식 외에는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요한 사회적 중요한 이슈를 두고 종종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촛불 시위는 한국적 민주주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고, 2016~17년의 촛불시위는 그러한 특징을 완성한 시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정권교체나 박근혜 전대통령만을 주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촛불시위 발생전후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사건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정윤희 국정 개입 의혹·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특혜·체육인재육성재단 해산 사건·평창 동계 올림픽 개입 의혹·늘품체조 기획·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국민연금공단 삼성 특혜 의혹·문화체육관광부·미르재단·비텍스포츠·삼성그룹(삼성전자 승마단)·자유한국당·통일교·신천지·영세교·전국경제인연합회·차병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K스포츠재단·박사모·어버이연합 등의 사건이나 명칭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를 그대로 보여준 은 것들이다.

이들 사건과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적폐와 기득권의 질서유지를 위한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정부패하며, 오랫동안 축적된 모순과 피해들을 바꾸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던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했던 국가권력을 소환하고 파면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적 질서를 확인시켜준 전환기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 강용진, “직접행동과 숙의민주주의: “촛불집회”사례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2호, 2008.
- 강명세,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의정연구』 제 51권, 2017.
- 고경민, 송효진,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합의 :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 고원,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7권 2호, 2008.
- 권지희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서울: 해피스토리, 2008.
- 김옥,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2010.
- 김종범, “촛불시위를 통해 본 정치권력의 변화와 의미.”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2008.
- _____, 『그람시의 군주론』, 서울: 바다출판사, 2015.
- 서광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인가 : 2008년 촛불시위의 특징과 그 원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08).
- 서복경·이지호·이현우 공저,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서울: 책담, 2017.
-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체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2009.
- 송호근, 『촛불의 시간: 군주, 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서울: 북극성, 2017.
- 윤성이,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2009.
- 이완범, “2008년 촛불시위의 영향 : 촛불 진화 후 '중도실용' 구호를 내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종이 돌' 반격.” 『정신문화연구』 제34권 4호, 2011.
- 장훈, “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의정연구』, 제51권, 2017.
- 조중빈, 『새정치를 위하여 눈을 감아라: 촛불이 밝힌 국정철학, 시민이 말해야 대통령의 듣는다』, 서울: 인텔리겐자, 2017.
- 정해,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4.
- 정해구,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개혁의 실패.” 한국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서울: 당대, 1997.
- 채진원, “1인 시위와 촛불시위의 정치철학적 의미 : 한나 아렌트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 최영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서울: 책갈피, 2017.

홍성구,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의 공론영역: 속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제1호, 2009.

Gramsci Antonio, a cura di Gerratana Valentino, *Quaderni del carcere*, Torino: Einaudi, 1975.

PC 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 모색.” 『문화일보』 2004년 8월 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80101031629066001>(검색일: 2017.6.21.).

<http://www.gallup.co.kr>.

<http://www.raythep.com>.

Abstract

The Social-cultural Meaning and Change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Jongbub Kim (Professor, Daejeon Universit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olitical meaning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concentrating on the analysis of social-cultural changes after Keun-Hye Park's government and comparing it to the previous case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e Korean democratic system had been so fast changed into a more regressive one since Myoung-Park Lee's government. Bu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recurred in 2016 was a crucial phenomenon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a new form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to resist against the deterioration of Korean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we can underst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as a new symbolic sign of Korean democracy, providing some explanations of the processes and social-cultural impacts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Key Words: 'Candlelight Demonstration', Korean Society, Cultural Transformations Movements, National Sovereignty, Direct Democracy

투고일: 2018년 10월 31일, 수정일: 2019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6일